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가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목 차

■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소득수준별 가처분소득의 특징	2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10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김 천 구 연 구 위 원 (2072-6211, ck1009@hri.co.kr)

Executive Summary

□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개 요

국내 경제가 수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내·외수 균형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있는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높여야 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6년부터 지속해서 경제성장률을 밀돌고 있다. 부진한 가계의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득 확대가 중요하다.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지출 확대, 기업 매출 증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원인을 소득 측면과 비소비지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규명한다. 최근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던 2010~2012년과 증가율이 낮았던 2013~2016년의 비교를 통해 최근 가계의 가처분소득 정체의 특징을 찾았다.

■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내 가계 가처분소득의 특징으로는 첫째, 최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2013년 이후 저소득층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5%로 2010~2012년 6.5%에 비해 5.0%p 감소하였다. 중간소득층은 같은 기간 5.9%에서 1.7%로 4.2%p, 고소득층은 5.9%에서 2.1%로 3.8%p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 감소폭이 컸다. 이러한 가계소득의 둔화는 2013년 이후 이어진 경제의 장기 침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이 주된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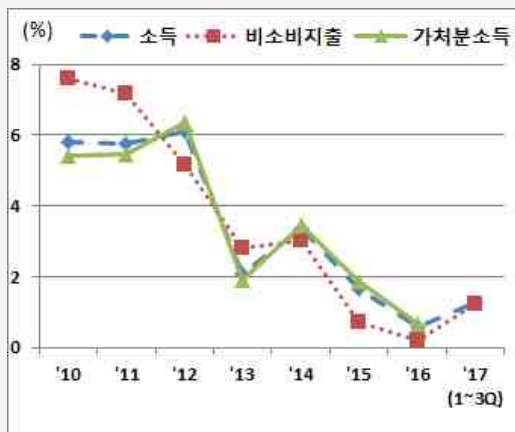
둘째,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완화되었다. 2013년 이후 저소득층 이자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2010~2012년 18.1%에 비해 20.6%p 감소하였고 중간소득층은 같은 기간 13.1%에서 -5.9%로 19.0%p, 고소득층은 5.6%에서 -3.0%로 8.6%p 감소하였다. 다만, 2013년 이후 추진되었던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 정책 영향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커졌다는 점과 기준금리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향후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보이고 이전소득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저소득층은 2013년 이후 비소비지출 부담이 완화되었음에도 소득 증가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특히 2013년 이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이전소득 증가율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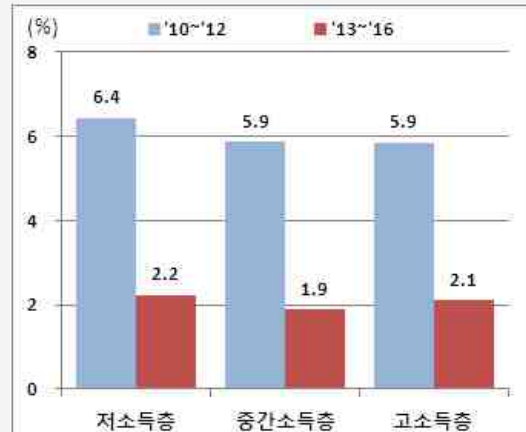
넷째,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세, 사회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중간소득층의 2013~2016년 기간 동안 조세(3.9%)와 사회보험(5.0%)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인 1.7%를 크게 상회하였다. 고소득층 역시 동기간 조세(4.1%), 사회보험(5.6%)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2.1% 보다 높았다. 향후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인구고령화 영향 등으로 조세, 사회보험 부담이 늘어나 중간소득층 및 고소득층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고소득층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보다 근로소득이 빠르게 성장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에서는 소득이 줄어들었다. 반면 근로소득은 늘어났으며 상승 폭 역시 비교적 높았다.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3~2016년 연평균 3.2%로 저소득층 -0.1% 및 중간소득층 1.5%에 비해 높았다.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 전체가구 소득, 가처분소득, 비소비지출 증가율 > < 소득수준별 가처분소득 증가율 비교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시사점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향상이 정체되어 있다. 소득 부진 현상을 완화하고 향후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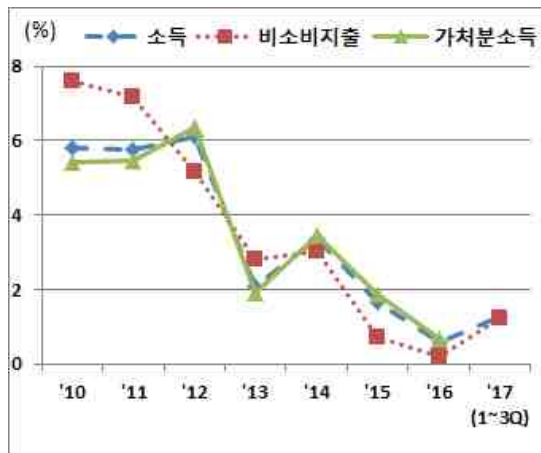
- 국내 경제가 수출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내·외수 균형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있는 가계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
 - 국내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있음
 - 수출 증가율은 2017년 15.8%를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
 - 내수 중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2017년 비교적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아직 민간소비 증가율은 높지 않음
 -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지속해서 하회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연속으로 실질 경제성장률을 밑돌았음
 - 2018년에도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은 2.5%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8%를 밑돌 것으로 예상¹⁾
 - 가계의 소비가 늘기 위해서는 소득 증가가 동반될 필요
 - 가계의 소득 둔화로 인한 소비지출 위축은 국내 경제의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 증가는 필수적임
 - 임금 인상→가계 소득 증가→소비지출 증가→기업 매출 증가→고용 확대 등의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가계의 소득 정체 원인을 소득 측면과 비소비지출 측면으로 구분하여 규명
 - 최근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비교적 높았던 2010~2012년과 증가율이 낮았던 2013~2016년 비교를 통해 가계 소득 증가율 둔화 원인을 찾음
 - 가계의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중 소득측면(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과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 소득계층별 정의는 저소득층은 소득1분위, 중간소득층은 소득 2~4분위, 고소득층은 소득 5분위로 함

1) 현대경제연구원(2017.12),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 소득수준별 가처분소득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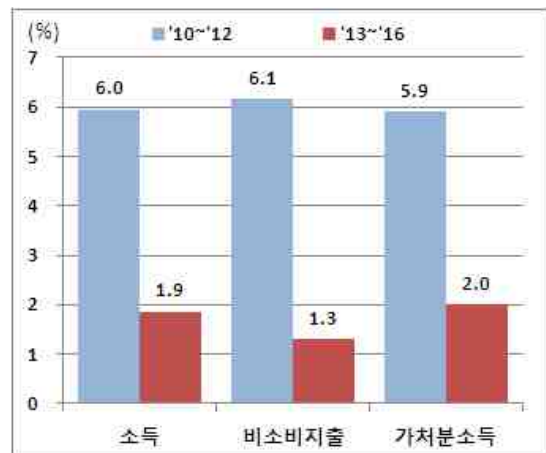
- (전체)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감소의 주된 원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가율 둔화, 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조세, 사회보험 부담 증가율 등임)
- 국내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5.9%에서 2013~2016년 2.0%로 3.9%p 둔화
 -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0년 295.8만원에서 2012년 331.7만원으로 연평균 5.9%씩 늘어남
 - 한편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은 2013년 338.1만원에서 2016년 358.8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에 그침
- 가처분소득 구성 요소 중 비소비지출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소득 증가율도 큰 폭으로 둔화
 - 소득은 2010년 363.2만원에서 2012년 407.7만원으로 연평균 6.0%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416.2만원에서 2016년 439.9만원으로 연평균 1.9% 증가에 그침
 - 비소비지출은 2010년 67.4만원에서 2012년 75.9만원으로 연평균 6.1%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78.1만원에서 2016년 81.2만원으로 연평균 1.3% 늘어남

< 전체가구 소득, 가처분소득, 비소비지출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명목 기준.
 주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전체가구 기간별 소득, 가처분소득, 비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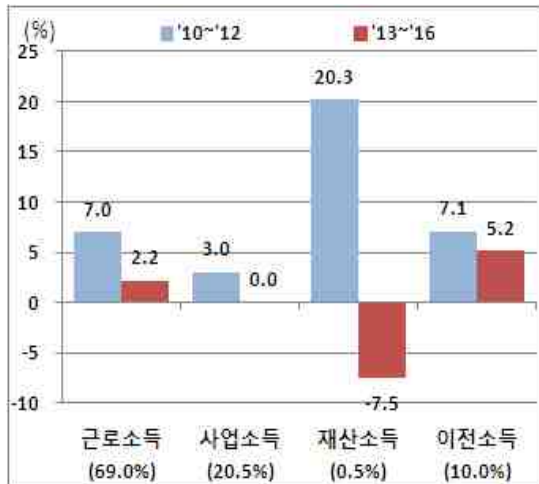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주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2) 가계의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경조소득, 당첨금 등 비경상소득은 일시적 소득이기 때문에 가계의 소득 원천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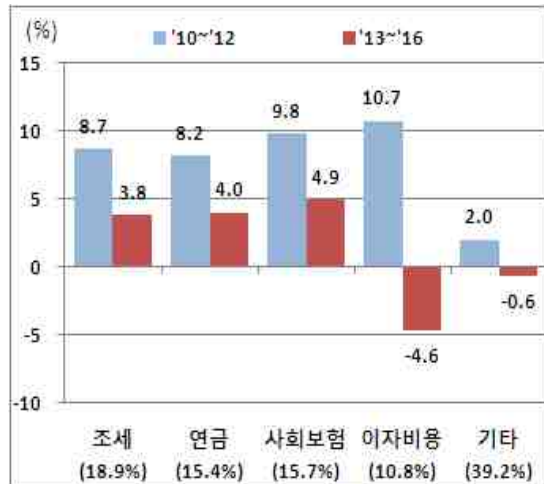
- 전체가구 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율 감소가 주된 원인
 - 근로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7.0%에서 2013~2016년 2.2%로 4.8%p 둔화되었으며, 재산소득³⁾ 증가율은 2010~2012년 20.3%에서 2013~2016년 -7.5%로 크게 감소함
 - 사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3.0%에서 2013~2016년 0%로 둔화되어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정체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이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7.1%에서 2013~2016년 5.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 부담은 크게 낮아졌지만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의 증가율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
 -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자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10.7%에서 2013~2016년 -4.6%로 감소세로 전환함
 - 조세(2010~12년 8.7%→2013~16년 3.8%), 연금(2010~12년 8.2%→2013~16년 4.0%), 사회보험(2010~12년 9.8%→2013~16년 4.9%) 등은 연평균 증가율 자체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임

< 전체가구 소득원천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3) 괄호 안은 경상소득 중 비중.

< 전체가구 비소비지출 항목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3) 괄호 안은 비소비지출 중 비중.

3)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의제이자소득, 기타재산소득으로 구성. 주택 등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

○ (저소득층) 조세, 이자비용 등이 감소하며 비소비지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음에도 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

-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6.4%에서 2013~2016년 2.2%로 둔화되었으며, 기간 내 증가율 변동이 큼

- 저소득층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크게 변동하며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 특히 2016년에는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6.2%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여 오히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감소
-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2010년 97.4만원에서 2012년 110.3만원으로 연평균 6.4%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112.4만원에서 2016년 120.2만원으로 연평균 2.2% 증가에 그침

- 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이 감소하였으나 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

- 저소득층의 소득은 2010년 119.1만원에서 2012년 135.2만원으로 연평균 6.5%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138.3만원에서 2016년 144.7만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하는 데 그침
- 비소비지출은 2010년 21.7만원에서 2012년 24.9만원으로 연평균 7.0%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25.8만원에서 2016년 24.5만원으로 연평균 1.7%씩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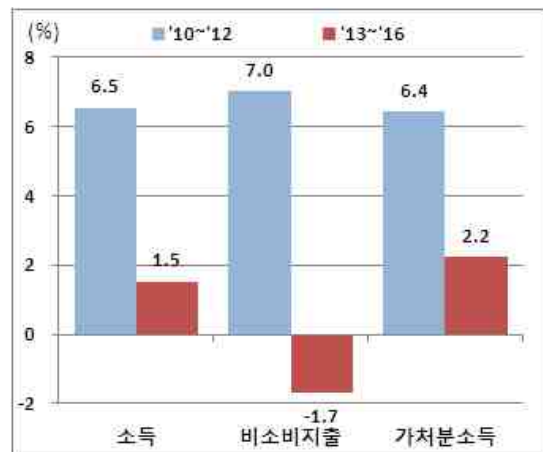
< 저소득층(1분위) 소득, 가처분소득, 비소비지출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1) 명목 기준.
- 주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저소득층(1분위) 기간별 소득, 가처분소득, 비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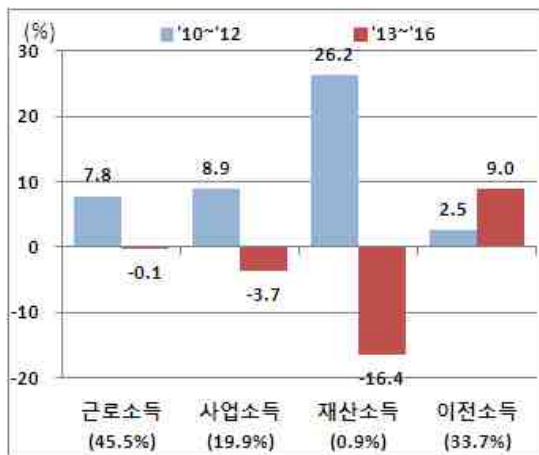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 주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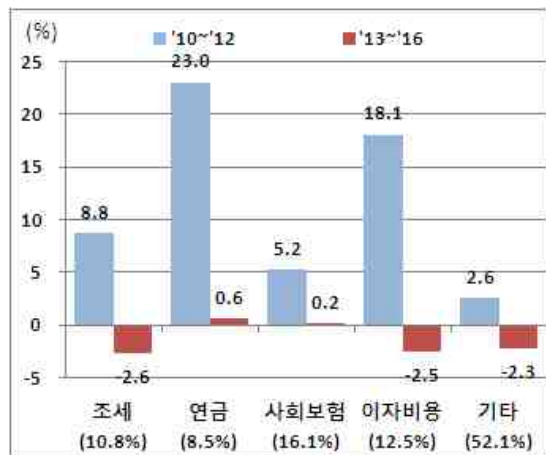
-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증가율이 모두 크게 하락하며 감소세로 전환한 반면 이전소득은 오히려 증가율이 늘어남
 - 근로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7.8%에서 2013~2016년 -0.1%로, 사업소득은 2010~2012년 8.9%에서 2013~2016년 -3.7%로 감소세 전환
 - 재산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26.2%에서 2013~2016년 -16.4%로 큰 폭으로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
 - 반면 이전소득은 연평균 증가율이 2010~2012년 2.5%에서 2013~2016년 9.0%로 확대
- 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 중 연금, 사회보험 지출 증가율이 줄어들었으며 조세, 이자비용은 감소세로 전환
 - 연금 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2010~2012년 23.0%에서 2013~2016년 0.6%로, 사회보험 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이 2010~2012년 5.2%에서 2013~2016년 0.2%로 크게 하락
 - 조세 지출은 연평균 증가율이 2010~2012년 8.8%에서 2013~2016년 -2.6%로, 이자비용은 2010~2012년 18.1%에서 2013~2016년 -2.5%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감소세로 전환

< 저소득층(1분위) 소득원천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3) 괄호 안은 경상소득 중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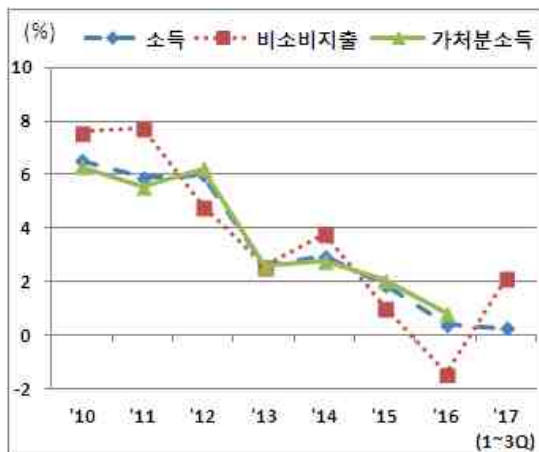
< 저소득층(1분위) 비소비지출 항목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3) 괄호 안은 비소비지출 중 비중.

- (중간소득층) 가치분소득 증가율 둔화 원인은 소득 측면에서는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 증가율 둔화이며 비소비지출 측면은 여전히 높은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부담임
- 중간소득층의 가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5.9%에서 2013~2016년 1.9%로 4.0%p 둔화
 - 중간소득층의 가치분소득은 2010년 276.5만원에서 2012년 310.0만원으로 연평균 5.9%씩 늘어남
 - 중간소득층의 가치분소득은 2013년 318.1만원에서 2016년 336.4만원으로 연평균 1.9% 증가에 그침
- 가치분소득 구성 요소 중 비소비지출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
 - 소득 증가율은 2010년 335.1만원에서 2012년 376.1만원으로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385.9만원에서 2016년 406.5만원으로 연평균 1.7% 증가에 그침
 -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10년 58.6만원에서 2012년 66.1만원으로 연평균 6.3%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67.8만원에서 2016년 70.1만원으로 연평균 1.1%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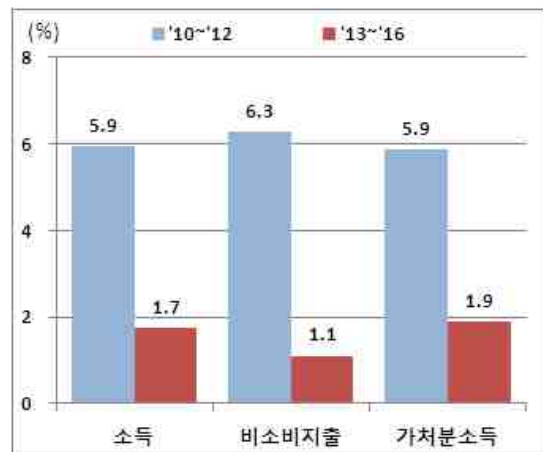
< 중간소득층(2~4분위) 소득, 가치분소득, 비소비지출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1) 명목 기준.
- 주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중간소득층(2~4분위) 기간별 소득, 가치분소득, 비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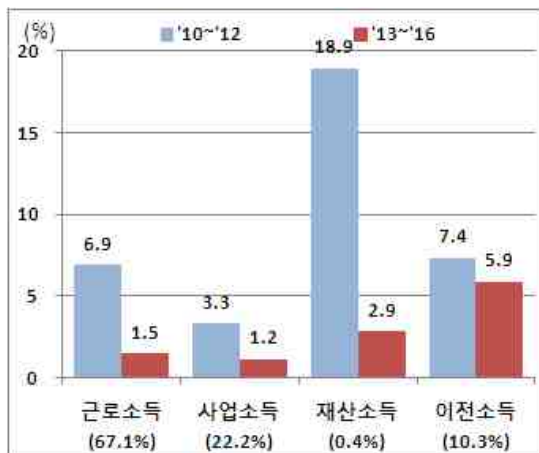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 주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가계 소득 중 이전소득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근로소득, 재산소득 증가율이 크게 하락
 - 근로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6.9%에서 2013~2016년 1.5%로 5.4%p 둔화되었으며 재산소득은 2010~2012년 18.9%에서 2013~2016년 2.9%로 큰 폭으로 낮아짐
 - 사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3.3%에서 2013~2016년 1.2%로 낮아졌음
 - 이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7.4%에서 2013~2016년 5.9%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 유지
- 비소비지출 중 저금리의 영향으로 이자비용 부담은 낮아졌으나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의 지출 부담은 여전히 높음
 - 조세(2010~12년 10.6%→2013~16년 3.9%), 연금(2010~12년 8.2%→2013~16년 3.5%), 사회보험(2010~12년 9.5%→2013~16년 5.0%) 등은 연평균 증가율 자체는 다소 낮아졌지만 증가율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음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13.1%에서 2013~2016년 -5.9%로 감소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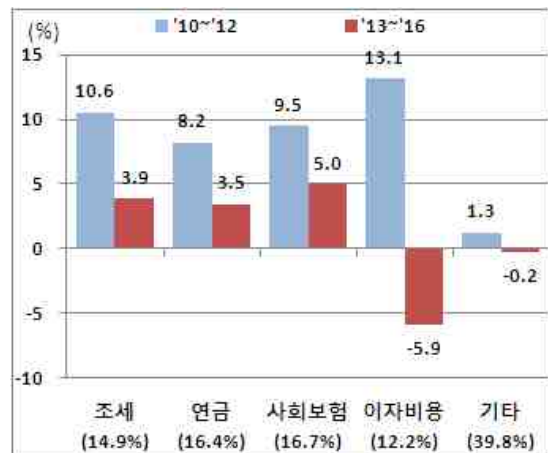
< 중간소득층(2~4분위) 소득원천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 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3) 괄호 안은 경상소득 중 비중.

< 중간소득층(2~4분위) 비소비지출 항목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 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3) 괄호 안은 비소비지출 중 비중.

○ (고소득층) 고소득층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에 비해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또한 크게 증가

- 고소득층(소득 5분위)의 가처분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2010~2012년 5.9%에서 2013~2016년 2.1%로 3.8%p 하락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2010년 551.8만원에서 2012년 618.3만원으로 연평균 5.9% 상승했으나 2013년 623.6원에서 2016년 664.0만원으로 연평균 2.1% 증가에 그침
- 2017년 1~3분기 소득 증가율은 상승했으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하락하여 2017년 고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증가했을 가능성
- 2013~2016년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5%, 1.7%이나 고소득층은 2.1%로 상대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높음

- 소득 및 비소비지출은 유사한 증가폭으로 증가함

- 고소득층의 소득은 2010년 691.3만원에서 2012년 774.7만원으로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으나 2013년 784.7만원에서 2016년 834.8만원으로 연평균 2.1% 증가에 그침
- 비소비지출은 2010년 139.5만원에서 2012년 156.4만원으로 연평균 5.9%씩 증가하였으며 2013년 161.1만원에서 2016년 170.8만원으로 연평균 2.0% 늘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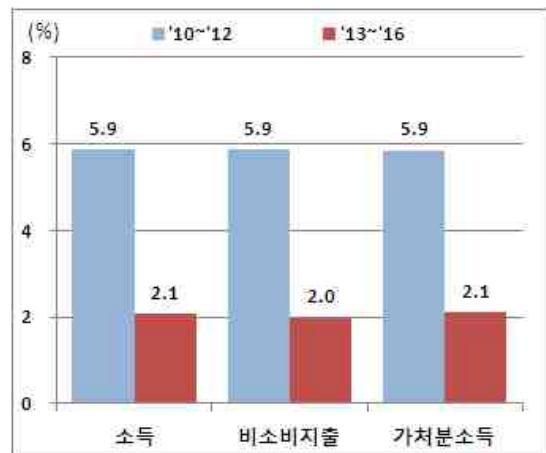
< 고소득층(5분위) 소득, 가처분소득, 비소비지출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1) 명목 기준.
- 주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 고소득층(5분위) 기간별 소득, 가처분소득, 비소비지출 연평균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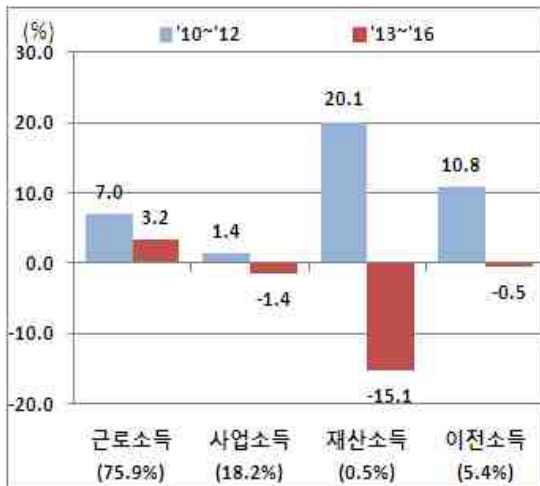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 주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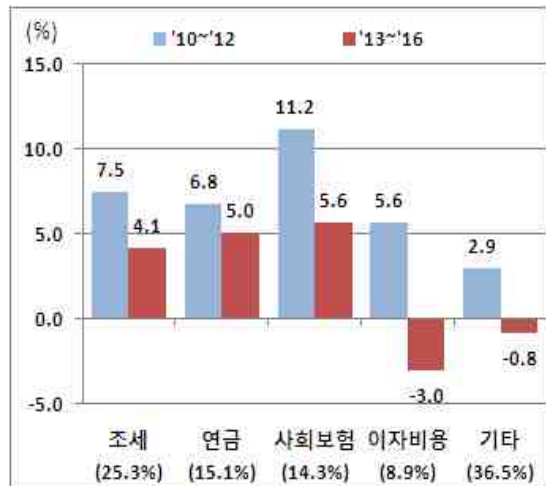
- 2013~2016년에 근로소득의 증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층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2013~2016년에 근로소득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여타 항목의 소득 증가율은 감소
 - 근로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16년 3.2%로 2010~2012년 7.0%로 하락하였지만 여타 계층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
 -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재산소득은 2010~2012년 기간에 비해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소득 또한 감소함
- 비소비지출 항목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의 부담이 확대
 - 2010~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5.6% 증가하였던 이자비용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2013~2016년 기간 동안 연평균 3.0% 감소함
 - 2013~2016년의 조세, 연금, 사회보험 지출은 2010~2012년 기간에 비해 증가율은 하락했으나 동 기간의 소득 증가율(2.1%)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조세 및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

< 고소득층(5분위) 소득원천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3) 괄호 안은 경상소득 중 비중.

< 고소득층(5분위) 비소비지출 항목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현대경제연구원 산출.
 주1) 명목 기준 연평균증가율.
 2)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
 3) 괄호 안은 비소비지출 중 비중.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 (종합평가) 가계 소득 증가율은 최근 둔화하는 모습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이전소득 의존도 증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격차 확대 현상이 우려
 - 최근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의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하는 모습
 - 2013년 이후 저소득층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3년 이전보다 5.0%p, 중간소득층은 4.2%p, 고소득층은 3.8%p 감소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크게 둔화함
 - 2013년 이후 이어진 경제의 장기 침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이 가계의 전반적인 소득 둔화의 원인
 - 2013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완화
 - 2013년 이후 저소득층 이자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이 2013년 이전보다 20.6%p, 중간소득층은 19.0%p, 고소득층은 8.6%p 줄어들어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이 완화됨
 - 다만,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과 향후 기준금리의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세를 보이고 이전소득 의존도가 심화
 -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이전소득 증가율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저소득층 소득 중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
 - 근로소득의 경우 2013년 이전(2010~2012년)보다 2013년 이후(2013~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7.9%p 감소한 반면 이전소득은 6.5%p 늘어남에 따라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짐
 -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세, 사회보험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

- 중간소득층의 2013~2016년 기간 동안 조세(3.9%)와 사회보험(5.0%)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인 1.7%를 크게 상회
 - 고소득층 역시 동기간 조세(4.1%), 사회보험(5.6%)의 연평균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2.1%를 상회
 -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인구고령화 영향 등으로 향후에도 조세, 사회보험 증가가 중간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
- 고소득층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보다 근로소득이 빠르게 성장**
- 고소득층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여타 경상소득 항목에서는 소득이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은 상승했으며 근로소득의 증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0~2012년에 비해 2013~2016년에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저소득층(-0.1%) 및 중간소득층(1.5%)에 비해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3.2%로 빠르게 증가함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격차 확대 현상이 우려됨
- (시사점) 고용 확대,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통한 가계 부문 소득 확충 노력 지속
- 소득 증가를 위해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에 주력**
- 일자리의 총량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근로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규제 합리화, 기업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
 -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탐색 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예상되는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대에 대비하여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희생제도를 확충**
- 미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할 것임

- 원리금상환 연체 및 채무불이행 상태에 처한 부실가구가 재할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부실가구의 채무 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회생 기회를 확대
 - 다만 채무자의 상환 의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과세 사각지역 해소,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을 지속하여 조세 수입 확충을 위한 재정구조 개혁 추진
 -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허용치를 포함한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 아울러, 재정규율의 강화를 위해 미국의 'PAYGO' 원칙⁴⁾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법안·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재원대책을 요구함
-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
-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하되, 이전지출 확대보다는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득 원천을 마련
 - 저소득층 임금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고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저소득층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김천구 연구위원 (2072-6211, ck1009@hri.co.kr)

김수형 연구위원 (2072-6217, soohyung@hri.co.kr)

오준범 선임연구위원 (2072-6247, jboh19@hri.co.kr)

신유란 연구위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4) 'Pay-as-you-go'의 약자로서 미국에서 1993~2002년 시행됐던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일종. 의회에서 재정지출이나 감세가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반드시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릴 방안을 법안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추진한 바 있음.